

# 전남개발공사-장흥군, 장흥산단 소송전 '휴전'

### 김철신 사장·정종순 군수 "미분양 해소에 총력" 공기업-지자체 갈등 확대에 부담 법적다툼 중단

장흥바이오산업단지(장흥산단) 미분양 용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이 법적 다툼을 중단하기로 했다.

13일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 장흥군을 방문한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정종순 장흥군수는 법적 다툼보다는 미분양 용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은 장흥산단

미분양 용지 인수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해 10월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장흥산단 미분양 용지를 협약대로 인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120만㎡ 규모의 장흥산단은 전남개발공사가 1465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 완공했다. 하지만 분양률이 지금까지 32%에 불과해 약 80만㎡의 용지가 미분양되면서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간 분쟁이 일었

다.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2월 장흥군과 체결한 협약에서 분양공고 3년 뒤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미분양 토지를 장흥군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흥군은 현재 미분양 용지와 금융비용 등을 합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인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지자체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협약은 원천무효라며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남개발공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기업과 지자체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자 양 기관 모두 부담을 느껴 결국 소송을 중단하고 근본 문제인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서자는데 공감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 취하는 아니다. 다만, 미분양용지 해소가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양측이 소송을 보류하고 미분양 용지 해결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향후 협약에 따른 추가 비용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우리가 왜 전남도 사무감사 받아" 나주시공무원노조, 전남도 감사관실 직권남용 고발

### 도 "황당...절차따라 대응" "전남도는 사전조사 규정을 약용해 감사 기간을 10일이 아닌 13일로 늘리고, 감사 대상이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까지 무더기로 요구했다"고 항의했다.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전남도 종합감사를 왜 받느냐"며 도 감사관실 직원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나주시지부(이하 노조)와 전남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남도 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 등 1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감사규정에는 시·도지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종합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전남도 감사는 법과 규정, 절차를 위반한 권한 없는 감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복감사 금지, 지자체 수감 부담 절감, 감사 효율성 등을 위해 2010년 5월 행정감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며 "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수년전 감사를 실시해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전남도는 사전조사 규정을 약용해 감사 기간을 10일이 아닌 13일로 늘리고, 감사 대상이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까지 무더기로 요구했다"고 항의했다. 이어 "고발과 별도로 전공노 전남본부, 사·군 노동조합과 연대해 권한 없는 전남도 종합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올해 7개 시·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유독 나주시 노조만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올해 초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해 감사계획을 세웠고 통보했다"며 "규정에 따라 이틀간 사전조사를 했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만 선별해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을 피하는 등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주시의 경우 사전조사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줄이고, 자료도 정식 요구서를 발부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다중이용 '위반 건축물 안전관리' 나서

### 30곳 안전감찰 54건 적발

광주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13일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30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정비계획 미 수립 ▲각종 인·허가 제한의 근거가 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내용 미 기재 등 모두 5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23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적정성 등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 후 위반유형, 규모, 형태를 고려해 30곳을 선정할 바 있다.

이들 다중이용업은 시설 증·개축 시 '전기사업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점검과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을 확인받도록 돼 있지만 일부 다중이용업 인·허가 변경신청서에는 누락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보안하도록 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의뢰법, 영유아보육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 법령의 인허가 변경신청서 양식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등 재 시, 건축 담당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에 위반 내용을 통보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구별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관리 실태는 남구는 비교적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는 전반적으로 부실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산구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반건축물 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다중이용 위반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병원, 숙박시설, 목욕탕, 스포츠센터 등 가운데 건축법에 정한 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수선 등 건축행위를 한 건물



고시텔 특별소방점검 서울 중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광주시 소방본부가 13일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중흥동의 한 고시텔에서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자 제안서 검증 착수

### 내년 3월 수용 여부 결정

광주시는 13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사실을 공고하고 타당성 검증 및 협상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뒤 2019년 3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7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편 시는 지난 8일 시민심사단, 전문가 제안심사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바 있다. 중앙공원 1지구(서구 금호, 화정, 풍암동 일원)은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서구 풍암동, 남구 주월동 일원)은 금호산업(주), 중외공원(북구 운암동 일원)은 (주)한국투자신탁이 각각 선정됐다. 또 일곡공원은 (주)라인산업, 운암산공원(북구 통일동 일원)은 우미건설(주), 신용(운암)공원(북구 신안동)은 산이건설(주)가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얻었다.

# 광주시의회, 채용 규정 위반 복지재단 특별감사

광주시의회가 광주복지재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나설 계획이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의 정례회 본회의에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행정 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감사다.

복지재단은 지난 8일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채용규정을 위반해 사무처장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임용된 A(63) 사무

처장이 '임직원은 정년(만 60세)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A 사무처장은 광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해 더욱 논란을 빚고 있다.

김광란(민주·광산4) 시의원은 "복지재단과 시체육회의 일부 인사 규정이 애매해 퇴직공무원들의 부분별한 재채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인사 규정을 체계적으로 손을 봐 투명한 인사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내일 서울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 국회 지원,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를 오는 15일 서울에서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권은희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장병안·최경환·김경진 의원 등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합작 완성차 광주공장 설립 협조와 내년 예산 지원 등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가 지원액 295억원 추가 반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시효 연장 등도 건의한다. 이와 함께 ▲경전선 전철화 145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194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30억원 ▲광주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 11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등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 예상·50KW급 매월 150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 1899-8947

시행 | (주)SB빌기름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